

회의자료 94-18

의료보장개혁위원회 제1분과 정책토론회

-의료보험관리운영 분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의료보장개혁위원회 제 1분과 정책토론회
- 의료보험관리운영 분야 -

1994. 4. 2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지정토론 요지 >

문 옥륜 (서울대 교수)

발표논문에서는 현행 지역의료보험제도가 당면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동안 발전시켜 온 사회보험방식의 테두리를 유지하면서 통합방식의 이점을 가미한 후 상호절충해가는 접근방식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음. 이와 같은 접근에 기본적으로 찬성을 하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음.

1. 농어촌 지역의료보험의 당면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용 정책수단이 많이 존재한다는 점 (예: 국고지원 개선, 취약조합 지원 재정공동사업)
2. 이러한 수단을 동원해 보지 않은 채 현재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직장공·교조합을 비교적 문제가 있는 지역조합과 통합부터 한다는 것은 문제해결을 위한 절차상의 적절성을 기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점. 현재는 기존체제를 보완하며 개선을 모색하는 단계이어야 한다고 생각됨.
3. 통합이 현재 거론되고 있는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는 없으며, 통합의 전제인 통합보험료 부과방식이 미개발된 상태에서 통합을 시도할 경우 큰 혼란과 또 다른 문제점이 초래될 수 있음.

- 농어민 지원확대를 위한 정책적 제안

- ① 50%의 국고지원을 법령에 명시할 것.
- ② 농어민이 부담하는 평균보험료가 직장 및 공·교 보험 적용자가 부담하는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할 것.
- ③ 도와주어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지역조합의 당년도 적자는 보험제도 내에서 익년도 말까지 완전하게 해소시켜 주도록 할 것.

- ④ 본인 일부부담금 상한제의 상한을 충분하게 내려야 함.
- ⑤ 여러가지 정책수단이 여의치 않을 경우 전국 단위의 농어민 단독조합을 설립한 후 조세방식으로의 전환을 모색해 볼 수 있음.

이 광찬 (원광대 교수)

1. 관리운영체계의 개선은 따로 분리되어 검토될 것이 아니고 의보제도 전반적인 문제점과 연계 검토될 사항임.
2. 조합방식과 통합방식의 비교가 필요하며, 조세방식에 관한 언급은 논의의 초점을 흐리게 할 우려가 있음.
3. 보험자간 경쟁의 원리 도입은 사회보험방식에 근본적으로 위배되는 것임.
4. 미봉책에 불과한 재정공동사업이나 국고차등지원은 오히려 낭비와 복잡 및 파행을 심화시킬것임. 따라서 근본적 해결을 위한 통합일원화를 제언함.
5. 통합시 연금 등 타 제도와의 통합관리체제로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음.
6. 조합운영의 자율성 제고는 의보조합운영을 사기업과 동일시하는 데에서 나온 발상이며 사회보험의 원리에 충실치 못한 것임.
7. 아울러 보험급여의 확대는 현 조합체제하에서는 취약조합의 재정난을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우려됨.

< 자유토론 요지 >

<학계 및 연구기관>

김 대모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1.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다고 해서 관리운영조직도 전국단위로 해야 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임.
2. 효율성과 형평성의 조화를 이루는데서 현실적인 타협점을 모색해야 함.
3. 형평성 측면에서
 - 전국단위 관리가 과연 실제로 형평적인지는 의문이고,
 - 통합시 근로자의 상대적 불이익 가능성도 우려됨.
4. 효율성 측면에서
 - 전국단위로 운영할 때 상당한 비효율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고,
 - 적정규모에 대한 연구 필요
 - 분립시 경쟁원리 도입으로 효율성 제고 가능다만, 공적조직 성격 강하므로 보완책 필요(경영 평가)

김 병익 (한림대 교수)

1. 재원조달 기전은 전국적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효율적임.
 - 즉, 의료보장세의 부과징수를 제언함 (징수비용 최소화)
 - 구체적으로 소득에 부과하되 자산 및 금융소득 포함 (단,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와 공동부담)
2. 급여관리에 있어서는 조성된 재원을 지역별로 배분하여 의료보장 및 기타 보건사업을 한개의 지역조직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토록 함.
 - 지역의 특성과 자율성 보장

문 형표 (KDI 연구위원)

1. 기존제도를 전환시에는 신중함이 필요함. 즉, 조합을 포기할 정도로 현 제도의 폐단이 심한지, 또한 현 제도 유지하에서 개선 가능성은 충분히 검토되었는지를 고려해야 함. (어느 제도에나 단점은 존재하는 것임)

2.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 국고지원의 문제를 보다 심층적으로 검토할 필요 있음.
 - . 우선적으로는 조합내에서 자체조달 내지 조합간 상호지원을 확대하고,
 - . 장기적으로 건실한 운영을 위해서는 국가재정중립이 바람직함.
- 차등지원의 문제도 신중히 고려해야 함.
 - . 조합의 비용절감 노력에 역효과를 줄 수도 있음
- 타 제도(예: 연금)와 연계된 소득추계방식의 개발에 보다 관심을 기울여야 함.
- 경쟁원리의 도입에는 원칙적으로 동감임.

박 재용 (경북대 교수)

1. 제도개선에 있어서는 현실적 상황을 중시해야 함.
(예: NHS등은 실현이 어려울 것으로 보임)
2. 기존 조합체제 유지에 찬성함. 다만, 운영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행정구역보다는 진료권 중심으로 조합지역 개편을 검토해야 함.
3. 국고 차등지원에 있어서 새로운 지표를 모색할 필요 있음. (예: 농업재해와 관련된 질병 등 도.농간 질병구조 차이 감안)

<언론계>

고 학용 (조선일보 논설위원)

1. 농발위는 의보통합을 건의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 주요 논거는 “조합간 재정 격차”의 해소임.
2. 그러나 이는 문제의 내용을 살피지 않고 결과만 부각시킨 점이 있음. 즉 직장조합의 경우 재정 흑자와 적립금 과다는 보험료 징수에 비해 보험급여가 작았던 것이 주요 원인임.
3. 통합이 일견 능률적으로 보이나 조합방식을 채택한 이상 제도의 전환에는 엄청난 혼란이 예상됨.
4. 기본적으로는 조합을 유지하고, 통합장점을 살리는 개선안에 동의함.
5. 세부적으로
 - 직장적립금 활용시 근로자 급여 확대(보험혜택)을 우선해야하고
 - 국고 차등지원은 적절하며
 - 전반적으로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주력해야 하고
 - 행정전산망 구축은 물론 시급한 문제로 생각됨.

- 아울러 일부 의보조합운영의 방만함과 비능률의 쇄신방안도 검토가 필요함.

장 현준 (중앙일보 논설위원)

1. 조합, 통합간의 논란이 집단이기주의와 연결되는 것은 지양해야 됨.
2. 통합필요성의 부각 이유(재정격차, 형평성, 자격관리, 농촌지원)를 고려해야 함
3. 최소한 의료서비스 보장은 국가의 고유업무임을 인식해야 됨.
4. 개인적으로 현행 조합방식의 문제점은 인정하며 개혁안 마련에 있어서 장기적 방향을 제시하고 보다 동태적 측면에서 분석하기를 바람.

<사회단체>

홍 성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연구위원)

1. 자영자 소득 파악 미흡으로 통합시 근로자 부담증가 가능성 있음.
2. 그러나 조합방식에도 문제가 있음.
3. 경쟁원리의 도입에도 효과가 의문시 됨 (자율권 보장 한계)
4. 광역화의 실시를 제언하며 빠른 기간내에 통합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 조세방식에 의한 수직적재분배 기능이 추구되어야 함.

정 태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연구실장)

1. 제시된 내용이 개혁안으로서는 다소 미흡한 감이 있음.
2. 조합, 통합방식 비교시 근본적 척도는 무엇이며 통합의 실체는 무엇인지?
3. 즉, 관리형태의 비교보다는 실질적 내용의 비교가 중요함.
4. 핵심적인 사항은 관리운영비 절감이라고 생각함.
5. 규모의 경제실현을 위해 적정조합규모의 검토가 필요함(예: 도 단위의 광역화)
6. 자영자 소득파악이 낮기는 하지만 지금보다 형평성 있는 보험료 부과체계 개발가능함.
7. 근본적으로 사회보험방식이므로 경쟁원리 도입은 효과가 의문시됨.
8. 전국통합시 관료화, 비대화 가능성을 인정하므로, 도단위 광역화시 이러한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김 훈식 (경영자 총협회 조사부장)

1. 발제 내용에 전반적으로 공감함.
2. 세부사항에 있어서, 적립금 활용문제는 조합의 적립기피 가능성을 고려하고 의료수요의 확대시 급여지출 증대를 감안하며, 직장조합 자율성 확보를 먼저 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함.

<의료계>

지 삼봉 (의학협회 서울시 의사회장)

1. 재정불균형 문제는 전문가가 해야 할 일이고, 공급자 입장에서는 보험행정전산망 단일화로 의료서비스 편의제공 향상이 가장 중요한 문제임. (료인과 환자 간의 갈등 해소)

임 응의 (병원협회 보험이사)

1. 조합방식의 문제점으로 재정격차, 관리운영비 과다, 자격관리 어려움 등이 있으나, 통합방식도 문제가 있어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함. 관료화, 획일화의 우려가 있고 관리운영비 절감도 속단할 수 없음
2. 통합시 조세방식은 의료의 사회화에 가까운 바, 우리나라는 민간주도의 의료 체계이므로 부적절함. 따라서, 조합방식을 유지하되 문제점 해소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임. (예: 보험조합의 광역화 검토 필요)

<보험자 단체>

백 문규 (의보연합회 심사기준부장)

1. 국민연대성, 형평성의 정확한 개념규정이 필요함.
2. 관리 가능한 범위내에서의 연대성, 형평성 추구해야 함(직역별, 지역별)
3. 통합시 관리운영비 절감은 명백한 증거 없음.

장 내식 (선경직장조합 사무국장)

1. 전국민의료 통합일원화시 국가관리하의 조세방식이 적절하며 대규모 법인 설립은 비능률적임.
2. 조합간 보험서비스 경쟁은 가능함.

박 종기 (의료개혁위 공동위원장)

1. 의료개혁방향은 문민정부가 지향하는 다음의 개혁방향과 일치하여 강구되어야 함.
 - 관료화 지양
 - 의사결정의 분권화
 - 행정규제 완화
 - 자율성 제고
 - 자발적 참여
2. 외국의 경험과 지난 17년간의 경험을 살려서 단점은 버리고 장점을 극대화하는 차원에서 개혁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